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 등 검 토 보 고 서

## <제196회 임시회>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석 동 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3월 1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경제정책실장)

#### 3. 제정 이유

-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 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와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안 제11조)

- 1) 범위 :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 2) 절차 : 주민의견 수렴 후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 및 지정
- 3) 내용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사유와 목적 등

나.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제한과 조건 등(안 제13조, 제14조)

- 1) 대규모점포 외에도 준대규모점포까지 등록 범위를 확대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다. 유효기간(안 부칙 제2항)

- 1) 조례 부칙안 제2항에서는 안 제9조제5호·제6호 및 제11조

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인 2013. 11. 23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정하였음

## 5.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1. 제정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전통시장을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할 수 있는 규모등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을 보호하려는 것임

### 2. 제정안 타당성 검토

-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이나 전통 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또한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상생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회에서 협의토록 함으로써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로부터 전통 시장의 보호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성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실행계획 등

제6조(상생발전 실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수립한 유통산업발전 실행계획과의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매년 유통산업상생발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과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4.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호
5.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6. 상생발전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실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4.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

- 가. 군내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 나. 군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 다. 군내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 라. 상공회의소 관계자
- 마.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 바.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사. 기타 군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2. 군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

- ④ 협의회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 ⑤ 협의회는 필요 시 개최하되, 협의회를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를 소집 등 협의회운동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군내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4.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5. 제12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9.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변경·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지역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실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회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 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9조제5호·제6호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붙임2)

## 관계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24]

[법률 제10398호(2010.11.24.)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3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3월 1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사회복지과장)

3. 개정이유

- 경로당 신·개축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으나 마을에 경로당이 없고 경로당 신축 부지가 없는 아파트 등은 경로당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이를 해소하고자 신·개축뿐 아니라 주택 매입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경로당 신축 사업비용 (공동주택법상 공동주택 제외)”을  
→ “경로당 신축 사업 및 매입 비용” 으로 개정 (안 제4조제1호)

5.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보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는 경로당 신·개축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아파트 등과 같이 경로당 부지 확보가 어려운 마을에 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토록 하려는 것임

##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경로당 신·개축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마을에 경로당이 없고 경로당 신축부지가 없는 아파트 등에 대하여 신·개축 뿐만아니라 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활용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어르신들의 안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경로당 신축 사업비용(공동주택법상 공동주택은 제외)”을  
“경로당 신축 사업 및 매입비용”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지원사업) (생략)	제4조(지원사업) (현행과 같음)
1. <u>경로당 신축 사업비용(공동주택 법상 공동주택은 제외)</u>	1. <u>경로당 신축 사업및 매입 비용</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

붙임3)

## 관계 법령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3월 1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환경과장)

#### 3. 제정 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9931호, 2010.1.13)제정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용어정의 및 책무 등(안 제2조 ~ 제5조)
- 나. 녹색성장 추진계획(안 제6조 ~ 제7조)
- 다. 녹색성장위원회 체계 및 운영(안 제8조 ~ 제11조)
- 라.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안 제12조 ~ 16조)
- 마.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안 제17조 ~ 제21조)

#### 5. 관계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1. 제정안의 취지

- 본 조례는 우리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 2. 제정안 타당성 검토

- 저탄소 녹색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요사항과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 생활 문화를 실천토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제8조에 녹색성장 위원회를 구성(20명내외)하여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목표달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2010년 행안부 및 환경부, 대구시의 녹색성장 평가지표 및 환경평가에서 조례제정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녹색성장 기반조성에 필요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 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 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6.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으로 「지속가능 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7.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 $\text{CO}_2$ ), 메탄( $\text{CH}_4$ ), 아산화질소( $\text{N}_2\text{O}$ ),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 $\text{SF}_6$ )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8.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9.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를 말한다.
-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라 한다)은 주민, 기업, 경제단체, 시민 단체 및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에 노력한다.
  2. 군은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군은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군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군은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군은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군은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녹색성장 추진계획

제6조(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 성

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녹색성장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인근 자치단체와 연계한 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수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에 보고한 후 이를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군수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평가 하여 그 결과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이행상황 점검·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회별 2명 이내의 위원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3장 녹색성장위원회 체계

제8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한다.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 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산업·기술 분과위원회 : 녹색성장 추진계획, 재정, 법제도 및 녹색기술, 녹색성장 관련 일차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
2.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배출권 거래제 등의 분야

3.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 녹색국토, 녹색건물,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물관리 등의 분야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력, 국제협상, 기업고충처리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실비 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제12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군수는 환경부장관과 대구광역시장의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예방 등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13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군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4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군수는 군의 공공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③ 군수는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④ 군수는 보유한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한다.

제15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군수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
2. 자전거 이용 등의 활성화 추진
3.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 추진
4.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물 관리 대책
5. 생태관광의 촉진
6.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 옥상·벽면녹화 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7. 에너지·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8.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9. 지역의 폐급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16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군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군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세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⑤ 군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17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역은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지역·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군, 기업 및 주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군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18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군수는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을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군수는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0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

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관계 법령****[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3월 1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치수방재과장)

#### 3.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기 위함.

#### 4. 주요내용

-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9조)
- 나. 심의위원회의 기능(안 제10조)

####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1. 개정안의 취지

-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 관리함으로써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심의에 내실을 기하기 위함임.

##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제2항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건설과장, 치수방재과장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계인사중 군수가 위촉하는 차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본 조례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3) 관계법령 1부.

붙임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및 제10조(시행규칙)를 각각 제 11조, 제12조로 하고,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및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건설과장, 치수방재과장 및 기금운용과 재난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계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설&gt;</u></p>	<p><u>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u>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p> <p>②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건설과장, 치수방재과장 및 기금운용과 재난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계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p>④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p>
<p><u>&lt;신설&gt;</u></p>	<p><u>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u>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li> <li>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li> <li>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li> </ol>
<p><u>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u> (생략)</p>	<p><u>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u> (현행과 같음)</p>
<p><u>제10조(시행규칙)</u> (생략)</p>	<p><u>제12조(시행규칙)</u> (현행과 같음)</p>

붙임3)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3월 1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건축과장)

#### 3. 개정이유

- 노후 공동주택의 빠른 증가 및 자체관리 능력 부족에 따른 개·보수비용 지원에 대하여 단지규모, 세대수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입주민들에게 관리비용을 절감시켜주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 4.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기간단축 : 10년 → 7년 (안 제3조제1항)

나. 지원예산의 한정 : 예산의 범위 안 → 해당 회계연도 전체 예산의 1% 범위 이내 (안 제3조제2항)

다. 지원대상 시설물 확대 : 경로당 개·보수, 보안시설, 외벽도색 등 (안 제4조제1항)

라. 재지원 기간단축 : 5년 → 3년 (안 제4조제2항)

#### 5. 관계법령

-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1. 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노후 공동주택의 빠른 증가는 물론 자체관리능력이 부족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도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우리군내 2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체 관리능력이 부족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규모, 세대수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함으로써 입주민들의 관리비용을 절감시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지원대상기간을 단축하고, 해당 회계연도 전체예산의 1%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한정하고 지원대상 시설물을 규정하고 재지원 기간을 단축하는 (본 조례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1)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종합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①지원대상은 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 설  
물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일 포함)로부터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다만,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은  
제외)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동주택 관리 지원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전체 예산의 1% 범위 이내  
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리비용 지원대상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구성되어 운영중인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및 어린이놀이터보수”를 “보수”로 하고,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안시설

제4조제1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어린이 놀이기구 및 놀이시설 보수·교체·신설
7. 도시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벽 도색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위해 방지사설, 공동설비 등)

제4조제2항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3호 중 “교통과장”을 “도시시설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법 제52조”을 “주택법 제52조”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29조제1항”을 “주택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2조”을 “제14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달성군 행정구역안에서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단 임대주택은 제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종합계획 수립)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적용 범위등) ① 지원대상은 사용검사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일 포함)로부터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다만,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은 제외)
②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 관리 지원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전체 예산의 1% 범위 이내로 한다.

현행	개정안
제4조(지원대상 시설물)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관리비용 지원대상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구성되어 운영중인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경로당 중·개축 및 어린이놀이터보수	3. 경로당 중·개축 보수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위해의 방지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5. 보안시설
<신설>	6. 어린이 놀이기구 및 놀이시설 보수·교체·신설
<신설>	7. 도시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벽 도색
<신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위해방지시설, 공동설비 등)
②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 받을 수 없다.	②.....3년.....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③ (생략)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건설과장, 교통과장, 공원녹지과장	3. 건설과장, 도시시설과장, 공원녹지과장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설치)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설치) 주택법 제52조..... ..... ..... ..... .....
제13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법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 한다.	제13조(기능) .....주택법 제29조 제1항..... ..... ..... .....
제15조(결격사유)① (생략) 1. ~3. (생략) ②분쟁조정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의 임직원은 제1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5조(결격사유)①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②..... ..... 제14조..... .....

붙임3)

## 관계 법령

###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용도지구(화원읍 마시동마을 외 13개 집단취락지구)-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3월 1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건축과장)

#### 3. 제출사유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정비하고 생활환경개선을 도모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을 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 4. 관계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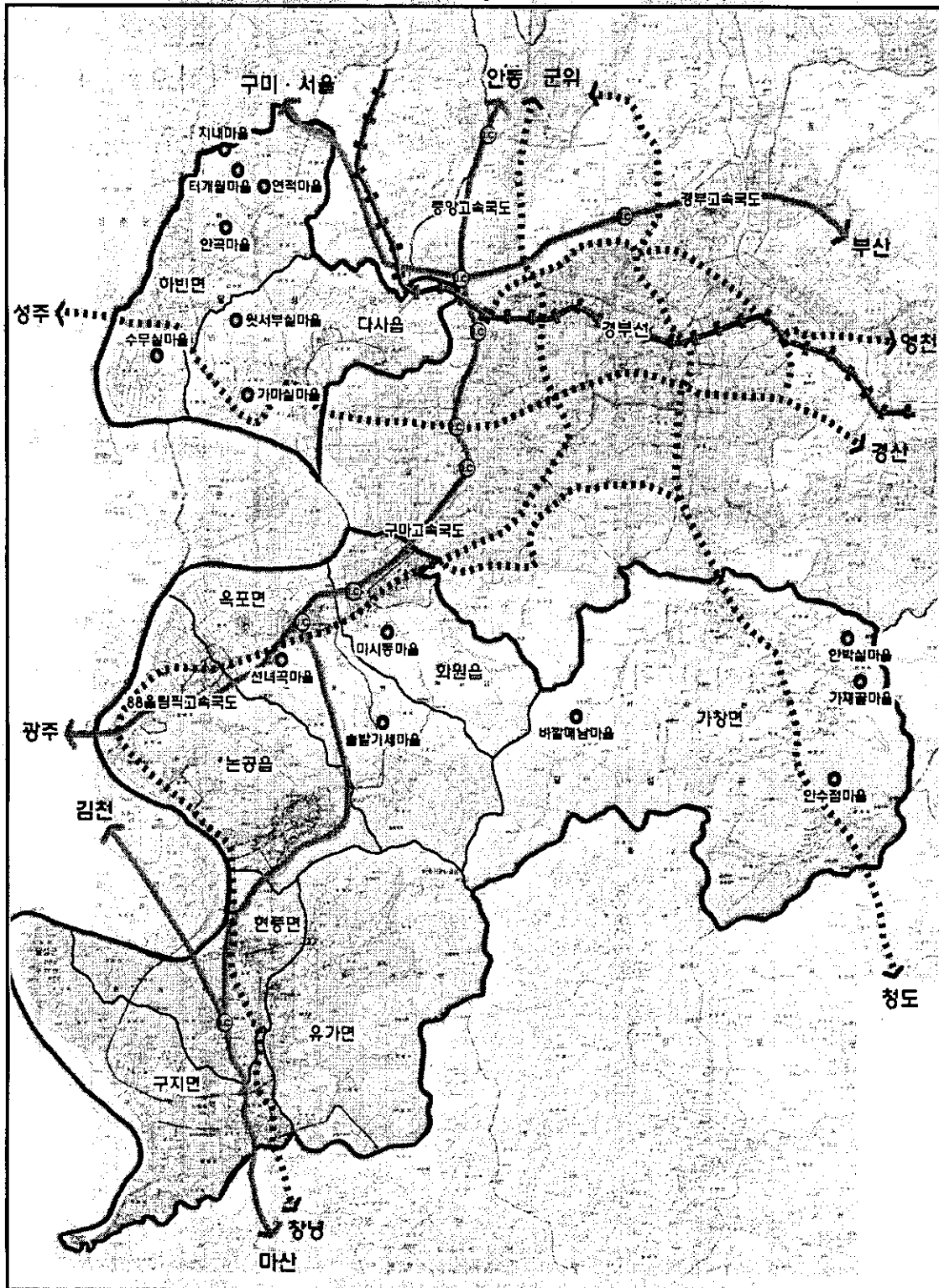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 5. 주요 내용

## ○ 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변경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계	14개소			243,020 258,020		
기정	11	마시동	집단취락지구	화원읍 명곡리	15,550	달성고 제46호 (06.10.30)	
변경	1	마시동	집단취락지구	화원읍 명곡리 860-2번지 일원	16,096	-	
기정	5	윗서부실	집단취락지구	다사읍 문양리	23,380	달성고 제46호 (06.10.30)	
변경	2	윗서부실	집단취락지구	다사읍 문양리 94번지 일원	26,904	-	
기정	4	가무실	집단취락지구	다사읍 부곡리	14,260	달성고 제46호 (06.10.30)	
변경	3	가마실	집단취락지구	다사읍 부곡리 399번지 일원	14,297	-	
기정	1	바깥매남	집단취락지구	가창면 정대리	20,770	달성고 제46호 (06.10.30)	
변경	4	바깥매남	집단취락지구	가창면 정대리 176번지 일원	20,770	-	
기정	2	안박실	집단취락지구	가창면 상원리	19,350	달성고 제46호 (06.10.30)	
변경	5	안박실	집단취락지구	가창면 상원리 39번지 일원	20,215	-	
기정	3	가재골	집단취락지구	가창면 상원리	23,190	달성고 제46호 (06.10.30)	
변경	6	가재골	집단취락지구	가창면 상원리 531번지 일원	24,169	-	
기정		안수점	집단취락지구	가창면 삼산리	19,450	달성고 제25호 (07.5.21)	
변경	7	안수점	집단취락지구	가창면 삼산리 497-4번지 일원	22,702	-	
기정	9	지내	집단취락지구	하빈면 기곡리	16,890	달성고 제46호 (06.10.30)	
변경	8	지내	집단취락지구	하빈면 기곡리 1046번지 일원	17,767	-	
기정	8	터개월	집단취락지구	하빈면 기곡리	12,960	달성고 제46호 (06.10.30)	
변경	9	터개월	집단취락지구	하빈면 기곡리 984번지 일원	14,032	-	
기정	7	연적	집단취락지구	하빈면 기곡리	13,860	달성고 제46호 (06.10.30)	
변경	10	연적	집단취락지구	하빈면 기곡리 544번지 일원	13,931	-	
기정	6	안곡	집단취락지구	하빈면 묘리	12,920	달성고 제46호 (06.10.30)	
변경	11	안곡	집단취락지구	하빈면 묘리 91번지 일원	14,593	-	
기정	10	수무실	집단취락지구	하빈면 봉촌리	15,550	달성고 제46호 (06.10.30)	
변경	12	수무실	집단취락지구	하빈면 봉촌리 323번지 일원	15,658	-	
기정	12	선녀곡	집단취락지구	옥포면 교항리	15,570	달성고 제46호 (06.10.30)	
변경	13	선녀곡	집단취락지구	옥포면 교항리 2841-26번지 일원	15,839	-	
기정	13	술밭기세	집단취락지구	옥포면 기세리	19,320	달성고 제46호 (06.10.30)	
변경	14	술밭기세	집단취락지구	옥포면 기세리 876-2번지 일원	21,047	-	

## 위 치 도



## □ 검토의견

-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의 토지이용합리화, 경관·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등,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여 효과적인 취락정비 유도를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를 변경 결정하기 위해 2011년 3월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금회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은 2006년 10월 30일 및 2007년 5월 21일 결정된 취락지구 변경사항에 대해 계획수립함이며,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관 계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2. 5] [법률 제10000호, 2010. 2. 4, 타법개정]

##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②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⑦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부칙** <제10000호, 2010. 2. 4> (문화재보호법)